룰이 무너진 교육, 흔들리는 고등교육

김 영 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학령인구 붕괴가 고등교육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신입생 충원에 내몰린 4년제 일반대학들이 생존을 명분으로 전문대학의 고유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뷰티, 제과제빵, 바리스타, 반려동물, 보건의료 등등. 전문대학이 수십 년간 산업 현장과 함께 축적해 온 실무학과들이 이제 4년제 간판을 달고 무분별하게 복제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이미 114개 일반대학이 520개 학과를 중복 개설했고, 그 수는 지금 더 늘었다. 이는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 아니다. 국가 고등교육 체계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 행위다.

먼저 두 교육의 본질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학문 교육은 “왜 그러한가”를 파고드는 교육이다. 원리와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의 깊이를 쌓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한다. 직업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를 완성하는 교육이다. 현장에서 즉시 통용되는 기술과 실무를 집약적으로 훈련해 전문가를 배출한다. 하나는 ‘연구실의 학자’를, 다른 하나는 ‘현장의 장인(匠人)’을 길러 낸다. 어느 하나가 위도, 아래도 아니다. 목적과 방법, 소요 기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두 축이다.

고등교육법은 이 구분을 이미 법률로 확정해 두었다. 제28조는 일반대학을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제47조는 전문대학을 “전문직업인 양성” 기관으로 명시한다. 일반대가 실무학과를 베끼는 순간, 법이 규정한 이 경계는 무너진다. 대학은 본분인 기초학문과 연구개발(R&D)에서 손을 떼고 손쉬운 실무학과로 정원을 채운다. 국가의 미래를 지탱할 학문 인프라가 정원 채우기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역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늘린 4년제 실무학과의 성적표는 오히려 초라하다. 교육부의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취업률은 72.1%로 일반대학 62.8%를 무려 9.3%포인트 앞선다. 2년이면 완성될 실무 역량을, 교양과목으로 포장해 4년으로 늘린 결과가 이것이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졸업생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시간과 비용만 갉아먹고 취업률은 떨어뜨린다.

피해는 학생과 국가가 함께 떠안는다. 학생은 2년의 청춘과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그 비용은 개인의 몫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국고가 함께 투입되는 까닭이다. 짧게 끝낼 교육을 억지로 늘려 세금까지 소진하는 이중의 낭비다. 더 심각한 것은 직업교육 생태계의 붕괴다. 지역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4년제가 그 수요를 흡수해 전문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지고 그 종착점은 지방소멸이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하지 않았다. 독일은 2020년 직업교육법(BBiG)을 개정해 상위 직업자격에 'Bachelor Professional', 'Master Professional' 명칭을 부여하되, 이를 대학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만 수여하도록 법으로 못 박았다. 직업교육의 위상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한 것이다. 미국은 커뮤니티칼리지의 학위과정 신설에 '인근 4년제와 중복 금지' 원칙을 적용해 영역을 조정한다. 영국과 호주는 일반대학의 재정지원을 연구 성과에 연동시켜, 대학이 실무학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설계했다. 역할 분담은 시장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로 관철해야 할 원칙이라는 뜻이다.

이제 국가가 결단할 차례다. 요구는 두 가지다.

첫째,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인력을 길러내는 기관에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책무다. 매년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재정지원을 넘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법정 재원의 근거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둘째, 법에 명시된 대학의 기능을 실제로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체성을 저버린 채 실무학과 신설을 강행하는 대학에는 앵커(옛 RISE)·글로컬대학 등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명확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실무학위의 무분별한 남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한정된 교육 예산은 일반대학의 간판 유지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학문을 발전시킬 인재와 산업 현장을 지킬 실무 전문가를 길러 내는 데 쓰여야 한다. 대학은 대학답게, 전문대학은 전문대학답게.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